

민간 차원 조사·연구로 '5·18 진실' 밝혀야



5·18 진상보고서 이대론 안 된다

<4> 민간조사보고서 검토해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부실한 조사로 인해 종합보고서가 오히려 왜곡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일부 5·18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진상조사위의 기존 조사 내용을 보완할 추가 조사가 민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차원의 조사라더라도 정치권 추천에 따른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조사결과가 변경될 수 있는 한계점 등을 보완하고 항구적인 5·18 연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민간 조사 보고서가 발간돼야 한다는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시기가 도래한 데 맞춰 민간 조사·연구를 통해 민간 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차원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로는 민간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 공식 조사를 보완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법무부 인권 보고서가 발간되면 인권단체 등에서 내용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고, 국제적으로도 유엔 경제 정세 보고서 등 보고서를 발간 이후 NGO 등 민간 단체에서 보완 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주장이 반드시 진실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국민들이 추가 검증은 거쳐 진상을 보완해

정치 이해관계 벗어나 독립적 연구·유연한 해석 장점 대만 '2·28 사건' 등 해외서도 민간 보고서 제작 사례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단 측 주장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민간보고서가 국가차원의 보고서보다 사안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도 한 몫하고 있다.

대만의 '2·28 사건'이 대표적이다. 2·28사건은 1947년 대만 시민들이 집권당(국민당) 정부의 부패와 독재를 반대해 민중봉기를 일으키자 3000여명 군대를 투입해 무력 진압을 한 사건으로, 1만~2만 8000여 명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 정부는 사건 이후 45년이 지난 1992년 정부(대만 행정원) 차원의 조사연구보고서를 냈으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등 한계를 보였다. 이에 대만 민간 단체인 2·28기념재단은 지난 2021년 '2·28사건의 진상과 변혁적 정의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 민간보고서를 내며 추가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

민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정부 주도 진상조사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조사 내용도 다룰 수 있으며 보다 유연한 해석과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진상조사위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맞춰 '진상규명', '진상 규명 불능' 두 가지 결정밖에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암매장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위는 암매장 사실 및 시신 발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행방불명자와 유전자 일치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지만, 민간 보고서에서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군 오전 무기고 피습설' 또한 계엄군·경찰

의 왜곡된 자료와 진술을 인용해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민간 조사를 통해 진상조사위가 수집한 진술과 자료의 신빙성을 2차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민간 조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연구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일부가 국민의힘 추천 위원 등 보수 성향의 위원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결론이 뒤바뀌는 등 한계를 경험했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이같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대한 평가도 마치지 않았는데 설불민간 조사 조사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부실 보고서는 이미 예견된 참사였으며, 민간 조사를 주장하는 5·18기념재단과 시민단체 등도 감시가 소홀했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면피성으로 민간보고서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민간 조사 보고서는 4년에 걸쳐, 오월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만든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을 뒤집어야 하므로 시민들의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조사관 선정과 조사 방법 등을 논하다 보면 진상조사위 활동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되풀이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면 민간조사를 논하기 전에 기존 진상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유연재 기자 yjyou@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미흡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 5·18 민주평화대행진. /김진수 기자 jeans@

'학동 참사' 추모공간 만든다

선양교회 철거부지 인근에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에 추모 공간이 들어설 전망이다.

30일 광주시와 동구,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월 13일 학동 참사 유가족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내 추모 공간 조성에 합의했다.

추모 공간은 사고지점에서 300여m 떨어진 선양교회 철거부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학

동행정복지센터 설립 예정부지 인근의 연결녹지(도시 내에 설치되는 녹지 산책로)로, 현대산업개발이 개발 완료 후 광주시에 기부채납할 부지다.

추모 공간은 광장 바닥에 '시간의 순환'을 뜻하는 4개의 원형 그림을 새기고 희생자 9명을 기리는 나무 9그루를 심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유족 측은 추모 공간을 특별히 돌보이게 하지 않고, 누구나 산책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을 시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북구 각화정수장에 원형보존 중인 사고

차량(버스) 활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광주시는 유족 측에 사고 차량 일부를 녹여 새로운 조형물을 만드는 안 등을 제안한 상태다.

지난 2021년 6월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현장에서는 재개발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594개동 중 592개동을 철거(철거율 99.66%)했다. 옛 학동주민센터 건물, 남광교회 체육관 2개 건물을 해체하면 철거 작업이 모두 끝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노소영, SK그룹 가치 증가 기여" 재산분할 1조3808억 '역대 최대'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주식 등 재산 모두 분할 대상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근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이인정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공사장서 갈취 건설노조 5명 검찰 송치

전남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트집을 잡아 공기연장 등을 빌미로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씨 등 건설노

조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무안·광양·순천 등지 아파트 공사현장 3곳에서 노조 전임비와 단체협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총 1800만원을 뜯

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불법채류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 불법을 트집잡아 신고를 통해 공사기간을 지연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료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며 각 사업장에서 6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함께하는 100년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